

일본정부 스스로 인정한 독도의 한국영유권

정태만¹⁾

목 차

I. 머리말

II. 1696년 안용복 사건 당시, 일본정부의 독도 조선영유권 인정

III. 1877년 태정관지령에 의한 독도 조선영유권 인정

IV.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의한 독도 한국영유권 인정

V. 맺음말

I. 머리말

독도는 울릉도에서는 87.4km, 일본 오키섬(隠岐)에서는 157.5km 떨어져 있다. 일본 오키섬과 독도간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1.8배 정도 더 멀다.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일상 생활권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일본 오키섬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독도를 보려면 100km이상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²⁾

이러한 사실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에도시대 울릉도에 왕래했던 일본 어부들조차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요인이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한 세트를 이루는 섬으로 인식하여, ‘다케시마’(竹島, 울릉도)와 ‘마쓰시마’(松島, 독도)로 이름 붙였다. 또한 두 섬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울릉도 지역 내의 독도’, ‘울릉도 근처 독도’ 등으로 불렀다.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는 인식은 일본 정부의 영유권 인식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17세기 에도시대부터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때까지 일본정부는 세 번에 걸쳐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인정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관한 일본측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연구중에도

1)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2)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근에는 촬영된 사진뿐만 아니라 수학적 분석결과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일본측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II. 1696년 안용복 사건 당시, 일본정부의 독도 조선 영유권 인정

1. 에도막부의 돗토리번에 대한 조화에 따른 ‘독도의 조선땅’ 확인

1693년 울릉도에서 조업중이던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 돗토리번(鳥取藩) 호키주(伯耆州)의 어부에 의해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과 외교교섭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상 안용복사건 또는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라 하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이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본 양국간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1695년 에도막부와 돗토리번과의 문답과정에서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일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지고 또한 확인되었다. 당시 에도막부의 “울릉도(竹島)는 언제부터 일본 땅이 되었는가?”, “울릉도(竹島) 이외에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에서는 “울릉도(竹島)는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에도막부에서 묻지도 않은 독도를 포함하여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 그 외에도 돗토리번에 소속된 섬은 없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³⁾

독도(松島)에 대해 돗토리번이 돗토리번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에도막부는 다시 독도에 대해 질문했는데, 1696년 1월 25일자 답변 내용은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가 제출한 『죽도지서부』(竹嶋之書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각서

(중략)

— 후쿠우라(福浦)로부터 마쓰시마(松島)에 80리⁴⁾

— 마쓰시마(松島)에서 다케시마(竹島)에 40리

이상

(1696년) 1월 25일

별지

— 마쓰시마(松島)에 호키국(伯耆國)으로 부터 해로 120리 정도입니다.

3) 박병섭·나이토 세이추(2008),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pp. 16-22; 당시 鳥取藩은 伯耆州와 因幡州를 관할했다. 질문과 회답은 다음과 같다.

江戸幕府의 鳥取藩에 대한 질문(『磯竹島事略』 元祿8년(1695) 12월 24일)

“因州伯州江附候竹嶋者、いつの頃より兩國江附屬候哉[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울릉도는 언제부터 因幡州·伯耆州에 부속되었는가?]”

“竹島之外兩國江附屬之嶋有之候哉[울릉도외에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있는가?]”

右之返答 松平伯耆守(幕府의 질문에 대한 鳥取藩 松平伯耆守의 회답, 『磯竹島事略』 元祿8년(1695) 12월 25일)

“竹嶋者 因幡伯耆附屬ニ而者無御座候 [울릉도는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다.]”

“竹嶋松嶋其外兩國江附屬之嶋無御座候事 [울릉도·독도는 因幡州·伯耆州에 부속하는 섬이 아니고, 그 외에도 부속하는 섬은 없다.]”

4) 福浦는 일본 오키섬에 있는 지명이다. 따라서 『磯竹島事略』과 『竹嶋之書附』에서 오키섬-독도(80리), 독도-울릉도(40리) 거리는 『太政官指令』에서의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쓰시마(松島)에서 조선에는 80~90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쓰시마(松島)는 (일본) 어느 지방에 속하는 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쓰시마(松島)에 어렵(漁獵)을 가는 것은, 다케시마(竹島)에 도해할 때 길목에 있기 때문에 들어서 어렵합니다. 타지방에서 어렵을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즈모(出雲國).오키섬(隱岐國) 사람은 요나고(米子) 사람과 동선(同船)하여 갑니다.⁵⁾

이와 같이, 일본 중앙정부는 독도가 뚝토리변 땅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인식만 한 것이 아니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에도막부는 마쓰에번(松江藩)에 대해서도 관할지역민의 울릉도(竹島) 도해에 대해 조회하여 1월 26일자 회답서에서 오키(隱岐).이즈모(出雲) 사람은 울릉도(竹島)도해에 적극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⁶⁾

에도막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과, 당초부터 조선 땅이라는 것이었다.

2. 안용복 2차도일 당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묵인

에도막부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1696년 1월 28일 일본인의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도해금지령은 즉시 일본어부와 조선조정에 통보되지 않고 지체되고 있었다. 1696년 5월에는 안용복과 순천승 뇌헌 등 일행 11명이 독도와 일본 오키섬(隱岐, 玉岐島)을 경유하여 일본 호키주(伯耆州)에 가서 ‘조울양도 감세장’(朝鬱兩島監稅將)을 가칭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 일본의 『인번지』에는 <그림 1>과 같이 1696년 안용복 일행이 타고 간 배에 달고 간 깃발이 그려져 있고, 11명의 이름과 신분도 기록되어 있다.

5) 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覺

(중략)

— 福浦より松嶋江八拾里程

— 松嶋より竹嶋江四拾里程

以上 子 正月廿五日

別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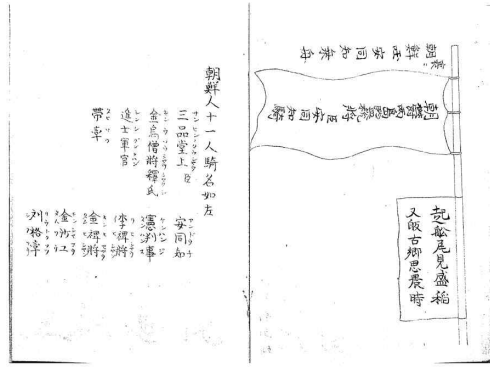
— 松嶋江伯耆國より海路百貳拾里程御座候事

— 松嶋より朝鮮國江は八,九拾里程も御座候様及承候事

— 松嶋は何れ之國江附候嶋ニても無御座候由承候事

— 松嶋江獵參候儀,竹嶋江渡海之節道筋ニて御座候故立寄獵仕候. 他領より獵參候儀は不承候事. 尤,出雲國,隱岐國之者は,米子之者と同船ニて參候事 以上 (『竹島之書附』 元祿9年(1696) 1월 25일); 鳥取藩 松平伯耆守의 에도연락관 小谷伊兵衛가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池内敏(2009), 「江戸時代における竹島および松島の認識について」, 『독도연구』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 184.



<그림 1> 1696년 안용복 일행 11명이 달고간 ‘朝鬱兩島監稅將’ 깃발과 명단

깃발에 쓰여진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중 ‘조울양도’(朝鬱兩島)의 의미에 대해 『인변지』에는 “조울양도는 울릉도[일본에서는 이를 竹島라 칭한다] 우산도[우사무수무, 일본에서는 松島라 부른다]이다.”라고 하여 7)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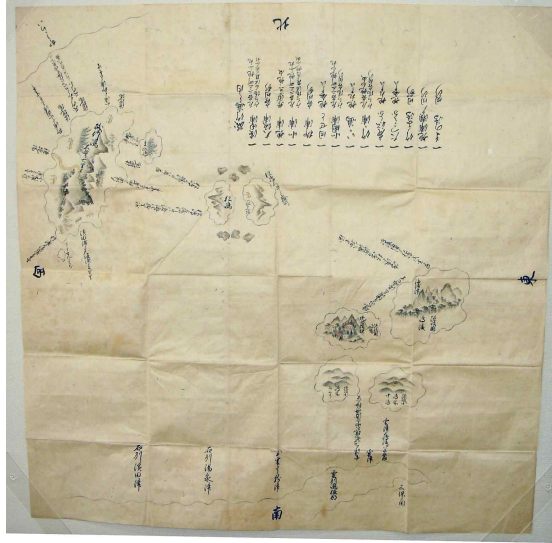
『속종실록』에도 안용복이 일본 호키주(伯耆州)에 가서도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前日以兩島事, 受出書契, 不啻明白)하다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호키주 태수는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다”(兩島既屬爾國)고 안용복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안용복이 2차 도일시에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조선땅이라고 주장⁸⁾한 데 대해, 일본 측에서 반론을 제기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⁹⁾ 설사, 명시적으로 ‘독도 조선 땅’을 인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분명하다.¹⁰⁾ 이는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에도막부가 인정한 것이다.

7) 右ハ、青屋村 茶屋九良右衛門ト云者所持ナリ。(中略) 次ニ圖スル船驗ハ、元祿 九年 六月 五日 朝鮮人 11人 騎ノ船 青屋ノ津ニ着ケル時ノ船驗ノ寫シナリ。朝・鬱兩島ハ鬱陵嶋[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于山嶋[ウサムスム 日本ニテ松嶋ト乎]是ナリ。(安部恭庵(1795), 『因幡志』, 鳥取縣立博物館 所藏)

8) 안용복 일행은 오키섬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江原道 此道中 竹嶋松嶋有之)이라고 주장했으며(『원록각서』), 백기주에 가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감세장’(朝鬱兩島監稅將)을 가칭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주장했다.(『인변지』)

9) 정대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26-27.

10) 金柄烈(2005),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학자들의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비판 : 元祿 9년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國際法學會論叢』 제50권 제3호, pp. 90-91.



<그림 2>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제출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

그런데도 일본 제국서원(帝國書院)의 중학교 『역사』에서는 ‘17세기(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은 영유권 확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죽도 양각그림 지도'(돗토리 현립 박물관 소장)를 제시하고 있다.¹¹⁾ 이 지도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확립의 근거자료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그림2>의 소곡이병위 제출지도¹²⁾는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서부』(竹嶋之書附)와 함께 안용복사건 당시 돗토리번 에도연락관인 소곡이병위가 에도막부에 제출한 자료로서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3.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인이 사는’ 일본의 한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을 나타낸 것인가?

일본 문헌에 독도가 등장하는 것은 대략 안용복사건 30년전인 1660년대 무렵이다. 마쓰에번사(松江藩士)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울릉도 도해에 참여하고 있던 오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초로 썼다고 하는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¹³⁾

서북방향으로 2일 1야(夜)를 가면 마쓰시마(松島)가 있다. 또 하루거리에 다케시마(竹島)가 있다. 속언에 이소다케시마(磯竹島)라고 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와 바다사자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인데 고려(高麗)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에서 오키섬(隱岐)을 보는

11) 김영수,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 비교」, 『독도연구』19호 (2015년 12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331.

12)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 제출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는 막부(幕府)의 도해면허에 관한 문의에 대(對)하여 제출하였다고 생각되는 죽도회도(竹嶋繪圖).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는, 막부(幕府)와의 섭외(涉外)를 담당한 문역(聞役)(에도 留守居)로 근무한 인물. 작성년대는, 막부로부터 죽도(竹島) 도해(渡海)에 관한 문의가 있는, 원록(元祿)9년(1696년)경이라고 추측된다. (三田清人, 「鳥取県立博物館所蔵竹島(鬱陵島)・松島(竹島 / 独島)関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平成19年3月), 竹島問題研究会, 2007.3, p28)

13) 김병렬·나이토 세이추(2006), 『한일전문가가 본 독도』, p.181.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乾地)¹⁴⁾ 한계는 이 주(此州)까지로 한다.¹⁵⁾

‘이 주(此州)’는 오키섬(隱岐)을 말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독도를 인지하기는 했지만, ‘일본의 서북한계는 이주(此州)를 까지로 한다’는 구절은 독도를 일본영토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¹⁶⁾

그런데, 일본의 오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는 위의 ‘한계는 이 주(此州)까지로 한다.’를 원문에 없는 ‘일본인이 사는’이란 말을 추가하여, ‘[일본인이 사는] 한계는 이 주(此州)까지로 한다.’로 해석하였다.¹⁷⁾ 일본인이 사는 한계는 오키섬까지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독도는 일본땅이 될 수도 있다고 오오니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오오니시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책의 한글 번역서를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간했다는 데 있다.¹⁸⁾ 이 일본우익 관변학자인 오니시 도시테루의 근거 없는 주장을 동북아역사재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다.¹⁹⁾ 동북아역사재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오오니시 도시테루를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가진 일본인’이라고 하나,²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오니시는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은 독도가 아니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인물이다.

III. 1877년 태정관지령에 의한 독도 조선영유권 인정

1. 『태정관지령』이 증명하는 3가지 사실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 학계에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동안 일본측에 의해 은폐되어 오다 1987년 호리 가즈오(堀和生)의 논문에 의해 발굴·공개되었고, 그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가 공개된 것은 2006년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에 의해서이다.

『태정관지령』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하는가?’ 하는 시마네현의 질의가 발단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또한, 그것이 『태정관지령』의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태정관지령』이 증명하는 사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내용이 관보

14) 건지(乾地)는 일반적으로 ‘서북’이라고 번역하나, ‘하늘과 땅’으로 번역할 여지도 있다.

15) 戊亥間 行二日一夜 有松島 又一日程 有竹島 俗言磯竹島 多竹, 魚, 海鹿 此二島 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望隱岐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隱州視聽合記』 卷1, 「國代記」)

16)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

17) 동북아역사재단(2007), 『독도자료집. 3, 隱州視聽合記』, 齊藤勘介 지음, 大西俊輝·권오엽 옮김, p35, p404

18) 동북아재단 독도 내부문건 번역 논란, 《연합뉴스》 2008.6.24

19) 동북아역사재단은 서문에서 이 부분은 재단의 입장이 아니고, 이 번역서는 재단 내부자료라고는 하나, 해당 부분에서 바로 주석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이 아님을 밝혔어야 마땅하다.

20) 동북아역사재단(2008), 『‘일본고문서 번역논란’에 대한 해명』, p.2

성격의 문서인 『태정류전』(太政類典)에 공시되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²¹⁾ 또한 그 판단 근거를 1690년대의 조선과 일본간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다. 따라서 『태정관지령』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이 『태정관지령』에 의해 결정적으로 증명이 된다.

현재 『태정관지령』은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주로 홍보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관보에 공시되었다는 내용 및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 1/3만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태정관지령』의 마쓰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측 주장 비판

일본측에서는 『태정관지령』을 인정하면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 논리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섬이 독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마쓰시마(松島)는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 다케시마(竹島, 독도) 문제연구회²²⁾측의 억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 다케시마(竹島, 독도) 문제연구회측의 억지 주장과 비판>

○ 서양인이 잘못 그린 지도를 보고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²³⁾)
비판: 해당 문서에 첨부된 지도인 「磯竹島략도」를 안보고, 서양인이 잘못 그린 다른 지도를 보고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코메디 같은 억지 주장이다.

○ 『태정관지령』 3년 후의 「군함아마기(天城) 보고서」를 끌어 들여 「군함아마기 보고서」의 松島는 울릉도니까 『태정관지령』의 松島는 울릉도라고 주장.(시모조 마사오)
비판: 『태정관지령』에서는 松島의 위치, 형상, 산물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부속지도인 「磯竹島략도」에도 松島가 어떤 섬인지 자세히 그려져 있다.

군함아마기 보고서는 『태정관지령』의 ‘松島’가 어떤 섬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아니다. 단순히 울릉도를 조사하고 울릉도를 ‘松島[한인 이를 울릉도라고 칭한다]’라고 기록한 울릉도에 대한 보고서일 뿐이다.²⁴⁾

21) 일본의 관보는 『태정관지령』(1877년) 이후 메이지(明治) 16년(1883년)에 창간되었다.

22) 竹島問題研究会는 ‘독도는 일본땅’ 억지 논리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다.

23) 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p.2.;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인천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발간 책에서 그의 억지 주장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24) 第二拾四號 水路報告 第三十三號

此記事ハ現下天城艦 乗員 海軍少尉 三浦重郷ノ略書報道スル所ニ係ル

日本海

松島[韓人之ヲ鬱陵島ト称ス] 錨地ノ發見

松島ハ我隱岐國ヲ距ル北西四分三約一百四十里ノ處ニアリ該島從來海客ノ精檢ヲ經ザルヲ以テ其假泊地ノ有無等ヲ知ルモノナシ然ルニ今番 我天城艦朝鮮へ廻航ノ際此地ニ寄港シテ該島東岸ニ假泊ノ地ヲ發見シタリ即左ノ圖面如シ 右報告候也

明治十三年九月十三日 水路局長 海軍少將 柳橋悅

(北澤正誠, 『竹島考證下』, 1881.; 北澤正誠 지음, 정영미 옮김, 『독도자료집 II 竹島考證』, 바른역사정립기획

군함아마기 보고서에 ‘松島는 울릉도’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태정관지령』의 松島는 울릉도’라는 주장은, “일본관광안내책자에 松島는 센다이(仙台)에 있는 3대절경중의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태정관지령』의 松島는 센다이에 있는 관광명승지다” 라고 주장하는 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 『태정관지령』 4년 후의 문서 「松島개간원」을 끌어들여, “「松島개간원」에서 松島는 울릉도를 뜻하니까 『태정관지령』의 松島도 울릉도다”라고 주장.(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²⁵⁾
비판: 위의 군함 아마기(天城)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 당시 시마네현에서는 松島를 독도라고 인식했지만, 중앙정부(내무성과 태정관)는 松島를 울릉도로 인식했다고 주장.(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²⁶⁾
비판: 똑같은 문서를 근거로 하여 그 문서에 적힌 대로 ‘송도’가 어떤 섬인지 판단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인식이 달랐다고 억지주장하고 있다.

○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태정관지령』 500년전 조선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于山, 武陵’ 기록을 끌어 들여 『태정관지령』의 松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²⁷⁾
비판: 당시 일본정부에서 송도가 어떤 섬인지 판단하는데, 문서에 첨부된 송도의 정의(definition)도 안보고, 부속지도도 안보고, 『세종실록지리지』를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의 가장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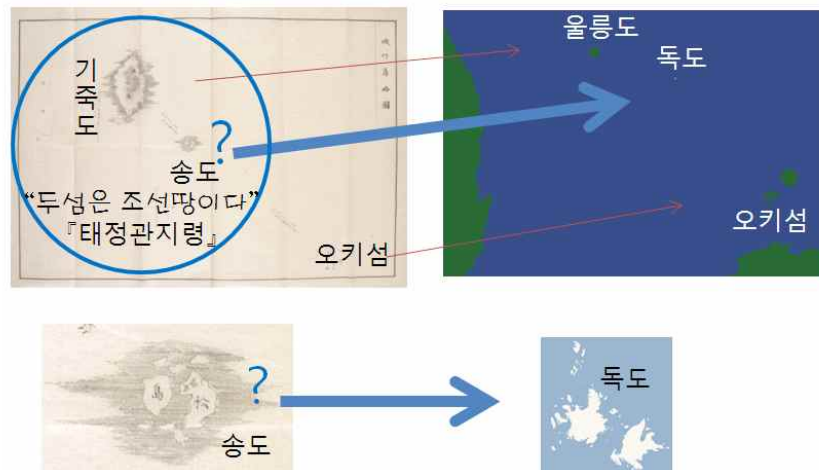
이와 같이, <그림 3>을 보면,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송도’(松島)가 독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단, pp.502-506)

25) 竹島問題研究會, 「第2期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中間報告書, p.16.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02/index.data/-04.pdf>, 2014.6.20 열람)

26)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第3版, 『調査と情報』-ISSUE BRIEF- No.701, 国立国会図書館, p.5.

27) 大西俊輝(2003),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pp.49-56.



<그림3> 『태정관지령』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²⁸⁾와 위성지도의 비교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송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이들과 국내학계와의 관계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모조 마사오의 『태정관지령』에 관한 주장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또한, 오오니시 도시테루의 『은주시청합기』해설책자를 번역·발간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쓰카모토 다카시의 논문을 아무 비판없이 게재했다.²⁹⁾

3. 국내학계의 태정관지령에 관한 폄하 실태

1)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은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측 주장 대변

일본 우익세력이 결정적 자료인 『태정관지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송도(松島)는 독도가 아니라고 거짓된 선전을 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 발간 책자, 『독도연구 : 한일간 논쟁의 분석을 통한 한국영유권의 재확인』에서는, 일본우익세력 시모조마사오의 억지주장을 학자의 학설인양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측 학자의 반박은 형식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다.³⁰⁾ 또한, 『태정관지령』 설명부분에서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송도’(松島)가 독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섬 송도가 독도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를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명백백하

28) 『公文錄』, 內務省之部一, 明治十年 三月, 2A-10-公-2032, 일본 国立公文書館 소장

29) 塚本孝,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시 독도 누락과정 전말」, 『한국군사』 3('96.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pp.39-67.

30) 김학준(2010), 『독도연구 : 한일간 논쟁의 분석을 통한 한국영유권의 재확인』, 동북아역사재단, pp.139-144.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기죽도약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책에서는 『태정관지령』에 관해 코메디같은 거짓말을 하는 시모조마사오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관성있는 논문’을 ‘저명한 월간지’ 출판사에 기고하는 교수로 묘사하고 있다.

2) 일본측이 억지주장하는 군함아마기 보고서를 전시

일본 우익세력인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가 『태정관지령』 3년후의 군함 아마기(天城) 보고서를 끌어들여, “군함 아마기 보고서에 ‘송도는 울릉도’라고 나오니까 『태정관지령』의 송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다”라고 하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우익세력이, 『태정관지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억지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 군함아마기 보고서를 『태정관지령』 바로 옆에 전시하였다.³¹⁾ 그것도 아무런 비판 없이 전시하여 사실상 일본우익세력의 선전을 대신해 준 것이다. 비록 현재는 전시하지 않고 있지만, 『태정관지령』에 대한 폄하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³²⁾

3) 최고국가기관(총리실)의 문서임에도, 내무성 문서로 격하

『태정관지령』은 단일의 문서가 아니라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결재품의서 등 14개의 문서와 「기죽도약도」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문서의 집합체이다. 그 중에서 『태정관지령』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는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³³⁾ 우대신(右大臣)과 당시 일본의 장관 3명이 날인한 『태정관지령』 결재품의서이다. 하급기관이 질의한 문서 보다는 그 상급 기관이 결재한 문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도, 동북아역사재단은 결재품의서가 아닌 내무성의 질의서를 『태정관지령』을 대표하는 문서로 전시하고 있다.³⁴⁾ 『태정관지령』의 사료적 가치와 국제법적인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4) 태정류전에 공시된 문서임에도 내부분서로 폄하

『태정관지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카다 다카시(岡田卓己)는 『태정관지령』에 대해 ‘한일시민의 우호를 위해 역사가 준 훌륭한 선물’

31) 독도체험관을 말한다.(<http://dokdomuseumseoul.com/book/> , 2015.10.5 열람)

32) 2017.3.30. 전시실 열람.

33) 태정관(太政官)은 관직명이 아니라 합의체 기관인 관청명이다.

34)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김세연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이다.(대한민국국회(2015),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33회(35차, 2015.5.15), 『제19대 국회 회의록』, 특별위원회, p.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이버 독도체험관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내무성의 질의서가 전시되어 있다. (<http://dokdomuseumseoul.com/book/> , 2015.10.5. 인터넷열람, 2017.3.30. 전시실 열람)

이라고 표현했다.³⁵⁾ 독도의 영유권 귀속을 명백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문서로 본 것이다. 『태정관지령』은 1987년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아주 부족한 편이다. 연구 부족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되고 있다.

『태정관지령』에 대해, 일본 행정기관 내부분서이므로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국내연구자도 있다.³⁶⁾ 그러나, 내무성에서 올린 『태정관지령』은 당시 총리급 1명과 장관급 3명이 지령안 결재품의서에 날인하여 확정하고, 시마네현에 지령을 내려 보내고,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 공시한 문서이다. 따라서, 내부분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어느 국내연구자는 지방의 학술회의에서 『태정관지령』은 대해안(案)에 불과하다고 발언하여 의도적으로 『태정관지령』을 폄하한 사례도 있다.

『태정관지령』을 최초로 공개한 교토대학 교수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것이 『태정관지령』에 의해 ‘선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내연구자는 『태정관지령』은 내부분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여 폄하하고, 동북아역사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하여도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시사상식사전』에서도 『태정관지령』에 관한 설명 맨 끝부분(결론에 해당)에서, “...일본 측은 『태정관지령』은 국내 문서에 불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어떠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하여, 일본측의 억지주장을 대변하여 『태정관지령』을 폄하하고 있다.³⁷⁾ 국내학계의 일본극우추종세력이 이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침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IV.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 일본영역참고도에 의한 독도 한국영유권 인정

1.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일본영역참고도, 일본영역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1951.9.8 조인, 1952.4.28 발효)은 2차대전 종전 이후 계속된 연합국에 의한 일본 점령통치로 부터 일본을 독립시키고, 일본의 영토를 정한 조약이다.³⁸⁾

35) 岡田卓己, 「1877年 太政官指令「日本海内 竹島外一島ヲ 版圖外ト定ム」解説」, 『독도연구』12 (2012년 6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199.

36) “...역사적 권원의 증거들 중 태정관 문서와 관련하여, 태정관문서는 일본이 대외, 즉 한국이나 제3국에 대하여 처분한 문서가 아니며, 일본 내부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한 문서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문서가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될 수 없는 문서이지만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제출 및 원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측 일방주장만으로 증거력을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이 선선히 이를 인정할 지 만무하여 간접의 증거로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렵다. ...”(이동원, 「독도문제 이대로 좋은가」, 『법률신문』, 2012.7.23.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826>, 2015.10.5 열람)

37) 「태정관지령」,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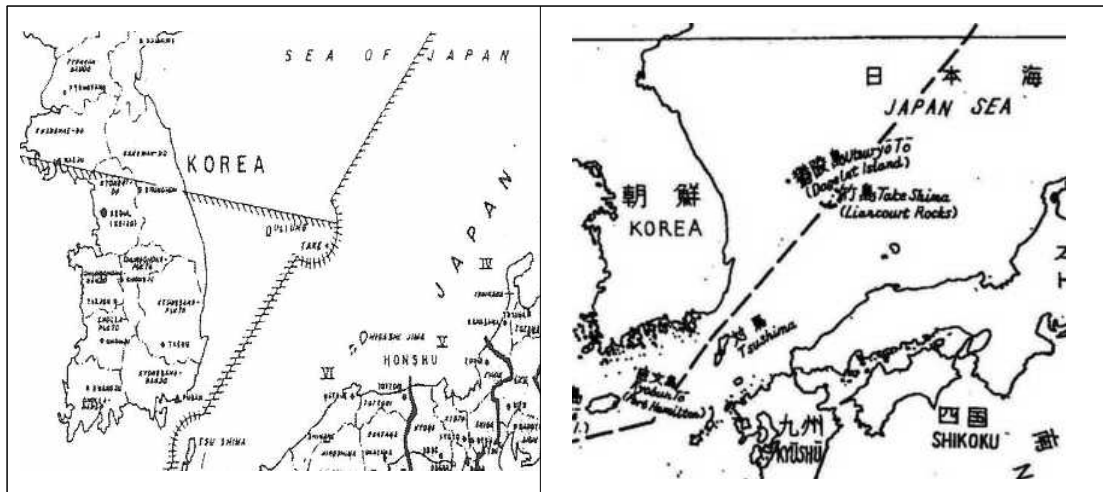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576&cid=43667&categoryId=43667>, 2017.5.11. 열람)

그러나, 독도와 같은 작은 섬들은 그 영유권 귀속을 조약조문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³⁹⁾

그런데, 조약 조인후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비준승인을 위한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일본국회는 독도를 한국영역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를 부속지도로 하여⁴⁰⁾ 조약의 비준을 승인했다.⁴¹⁾ 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독도 한국령’을 인정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Korea)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포기할 것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상으로도 ‘독도는 한국령’이 된다.⁴²⁾



<그림 4> 「SCAP관할지역도」⁴³⁾(1946년, 좌)와 「일본영역참고도」(1951년, 우)의 비교

「일본영역참고도」는 조약 서명(1951.9.8) 한달전인 1951년 8월, 일본정부 해상보안청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그림 4>와 같이 독도 동편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한국 영역에 표기하고 있다. 그동안 은폐되어 오다가 2014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공개되었다.⁴⁴⁾

38)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간에 체결되었다.

39)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40) 부속지도로 제출했다는 것은 1951.10.22, 중의원 ‘평화조약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 회의록과 1953.11.4,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에 의해 알 수 있다.

41) 일본헌법상 국회는 조약비준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한국헌법에는 주요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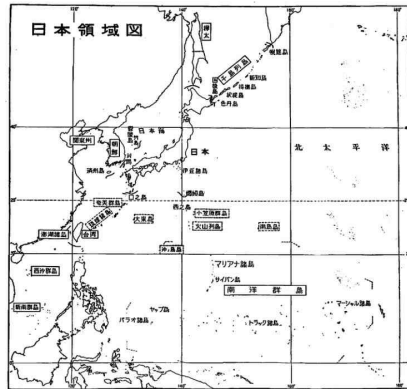
42)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해석상 독도를 한국땅으로 볼 수 있는 논리는 이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다.

43) 1946년 2월,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이다. 독도는 ‘TAKE’(Takeshima의 약자)라 하여, 주한미군 관할하의 남한지역에 속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하여는 일본의 국회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국회 회의록 중, 조약비준 승인 당시의 기록으로는 1951년 10월 22일 중의원 특별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며, 조약 발효 1년 후인 1953년 11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1970년 3월 24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은 1951년에 논의된 내용을 한번 더 언급한 것이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조약 당시에 독도를 포기하고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일본 유력일간지 신문사가 제작한 또 하나의 지도,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

마이니치(毎日)신문사는 샌프란시스코조약 효력 발생 직후인 1952년 5월, 조약 해설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안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일본영역도를 게재하였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는 '竹島'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한국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5> 1951년 마이니치(毎日)신문사의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

2.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국내연구자 주장 비판

1) 한국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48개국간에 체결된 조약인데, 한국은 많은 논란 끝에 연합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서명국 48개국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조약체약국만이 조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체약국이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연구자도 있다.⁴⁴⁾ 그러나,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잘못

44) 정태만(2014), 「17세기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 및 주변국의 인식과 그 변화」,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64-169

45)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동 조약 제23조에 언급된 국가 들 가운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의 동 조항의 규정은 조약의 비체약국들이 동 조약에 근거하여 분쟁 도서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체약국인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하에서 어떠한 특정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석우(2005.10),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영토 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북방사논총』 제7호, 고구려연구재단, p137.; 이석우(2002. 6), 「독도 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

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5조에는, 비체약국의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제21조에는 한국은 동 조약의 비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영토조항 등에 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는 오래 전 1969년 박관숙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미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⁴⁶⁾

2)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로 독도도 시마네현 관할로 복귀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7년 동안 계속되어 온 연합국의 점령 통치로부터 독립하여 일본의 주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빼앗은 영토를 연합국의 점령통치하에 두었다가, 도로 되찾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로 연합국의 점령정책이 끝남에 따라, 시마네현 관할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⁴⁷⁾ 이 주장은 일본 우익 관변학자인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주장⁴⁸⁾과 같은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로, 연합국의 점령 통치가 끝나니까, 연합국의 점령 통치 이전의 영토를 모두 되찾게 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틀렸다.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빼앗은 영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전에 대부분 되돌려 졌고, 이를 한번 더 확인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다. 독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1948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 하는 순간에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를 돌려주어야 될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이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독도가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음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조약 비준시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일본영역참고도」를 부속지도로 써서 국제법상 독도한국령을 인정했고, 샌프란시스코조약해석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되기 때문이다.

3)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국이 42개국이고, ‘독도는 한국땅’을 주장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연구』 제9권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pp.128-129

46) 박관숙(1969),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47) 그런데 1950년 7월 연합군최고사령부는 훈령 제2160호로 독도를 미국의 해상 폭격연습지로 지정하였다. 그 후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정책이 끝남에 따라 독도도 종전대로 시마네현 관할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지만, 미군이 계속해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희망했기 때문에 미일행정협정에 의하여 1952년 7월 26일 열린 미일합동위원회는 주일미군이 사용한 공군 훈련 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면서,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고시 제34호를 통하여 공시하였다.(조성훈(2009. 8.), 「1994년 벤플리트 사절단 보고서와 미국의 독도 인식」, 『동양학』 제4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210.)

48) 1950년 7월 6일, 연합군최고사령부는 훈령 제2160호로 독도를 미군의 해상폭격연습지로 지정하였다. 그 후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점령정책이 끝남에 따라, 독도도 종전대로 시마네현 관할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昭和25年(1950年)7月6日, 總司令部は 覺書SCAPIN第2160号をもって竹島を米軍の海上爆撃演習地区として 指定した。その後平和條約が 發効し, わが国に対する 聯合國の 占領政策が 終了したのに伴って, 竹島も 従前どおり 島根縣 隱岐支廳 管下に復歸することとなったが。);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古今書院, 1966, p252-253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다시 비준을 필요로 한다. 비준은 전권위원이 서명한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조약체결권자(보통은 국가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이다.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기타오카 토시아키(北岡俊明)는 『혐한류 디베이트』(嫌韓流ディベート)라는 책에서, 조약을 비준한 42개국에 ‘독도는 일본땅’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국내 학자 중에도 이를 확대 인용하여, 전세계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기타오카의 주장을 소개하거나,⁵⁰⁾ 이러한 견해를 정설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는데,⁵¹⁾ 이는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다.

우선 비준한 국가 숫자 42개국은 사실과 다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과 연합국간에 체결된 조약인데, 조약 서명국 48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약비준국은 47개국이다.⁵²⁾

다음으로 조약비준국이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도 근거없는 주장이다. 조약 조문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조약 조문에는 독도가 어느나라 땅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국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전세계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혐한류 디베이트』(嫌韓流ディベート)의 저자 기타오카는 일본에서 알려진 독도 연구자가 아니며, 또한 『혐한류 디베이트』란 책은 한국인을 혐오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에도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독도 전문가가 아닌 일본 극우 혐한선동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거짓된 내용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 「일본영역참고도」관련 일본국회 속기록 번역 오류

-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으로 잘못 번역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영역참고도」는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로서,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비준할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 조약의 부속지대로 국회에

49)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 있어서도, 죽도(竹島=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다. 조약을 비준한 42개국이 인정하고 있다. 이 조약을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다.”(기타오카 토시아키(北岡俊明), 『혐한류 디베이트』(嫌韓流ディベート), 총합법령출판, 2006, p128)

50)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한 국가가 42개국이고 세계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北岡俊明 2006년 p128)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조성훈(2008),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일 전략과 독도 귀속 문제」 『國際地域研究』 第17卷 第2號, 서울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p43)

51) ‘이에 따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한 국가가 42개국이고 세계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주장 할 수 있게 되었다.’(김영수(2008.12.), 「한일회담과 독도 영유권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회담 「기본관계조약」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4), 한국정치학회, p119)

52) 조약비준국 숫자를 45개국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도 있다. 어느 경우든 42개국이라는 숫자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것이다.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일본국회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그 속기록을 잘못 번역하여,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그려져 있다'는 식으로 번역한 책자가 동북아역사재단에 의해 발간되어, 이에 대한 연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⁵³⁾ 동북아역사재단의 책자를 인용하여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그려진 것으로 잘못 기술한 연구논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국회 속기록의 원문과, 동북아역사재단에 의해 잘못 번역된 내용, 그리고 올바른 번역은 아래와 같다.

○ 원문: 「日本領域参考図」を拝見いたしますと、ちょうど日本海を通っておりますこの日本の領域を表わします線が、竹島の真上を通っておりますのであります”⁵⁴⁾

○ 잘못된 번역: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参考図)」를 보면, 일본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죽도'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⁵⁵⁾

○ 올바른 번역: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参考図)」를 보면, 일본해를 지나고 있는 이 일본의 영역을 표시하는 선이, '죽도'의 바로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영역참고도」에 관한 국회 속기록 원문에 나오는 단어 '진상'(真上)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위'로서 일본어 사전으로도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영역을 표시하는 선 안에 독도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원문에도 없는 글로 바꾸어 번역했다. 이는 곧 의도적으로 번역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일본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아도, 그 원문에 그러한 번역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번역 잘못이 지적되었고, 번역 잘못과 관련된 「일본영역참고도」라는 자료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자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역사왜곡 대책특위에서도 「일본영역참고도」는 조약의 부속지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전시실에서도 전시하지 않고 있다.

5) 영미협상 당시 미국초안이 '독도는 일본땅'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대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것은 1951년 1월부터이다. 일본은 비록 연합국의 점령 통치하에 있었지만 일부 외교권이 주어지고, 미국과 일본간 협의와 병행하여, 같은 연합국인 미국과 영국간에도 조약초안을 둘러싼 협상

53) 동북아역사재단의 이 번역 오류는 2010년 정병준의 『독도 1947』에서 먼저 지적되었다.(정병준(2011), 『독도 1947』, 돌베개, p.861. 하단 주)119.)

54) 원문 출처: 1951년 10월 22일 일본 衆議院 第12回 国会 平和条約 및 日米安全保障条約 特別委員會 회의록 (속기록) (<http://kokkai.ndl.go.jp/SENTAKU/syugiin/012/1216/01210221216006a.html>, 2015.10.5 열람)

55)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 모음집 I부』, p.43.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미국과 영국은 각기 서로 다른 조약초안을 작성하여 협상에 임했는데, 영미협상 당시 미국초안에는 독도가 일본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⁵⁶⁾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미국초안에는 독도는 물론이고 제주도, 울릉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독도 노코멘트' 이었다. 즉, 미국초안에는 '독도 일본땅'도 '독도 한국땅'도 아니었다. 당시, 미국초안은 연합국 14개국과 한국정부에 배부된 1951년 3월 대일평화조약 잠정초안(제안용)이다.

1951년 3월 대일평화조약 잠정초안(제안용) 제3장 (영토) 제3항

3. 일본은 한국, 대만 및 팽호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⁵⁷⁾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초안의 영토조항은 아주 간략화되어 “일본은 한국, 대만 및 팽호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만 간단하게 규정하였다. 냉전체제로 같은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대립하여, 조약 조문에 개별섬의 영유권 귀속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는 것을 미국에서 기본적인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1949년 12월 29일자 초안 등 ‘독도를 일본영토’로 한 조약초안이 만들어 진 적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1951년 3월 이후 미국초안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한 것은 없었다. 요컨대,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을 위한 영미협상에서 미국초안은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 ‘독도 노코멘트’였다.

6)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목록'에 독도가 빠졌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고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은 지 6년이 지난 후인 1951년 9월이 되어서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초기의 평화조약 초안은 개별 섬의 영유권 귀속을 분명히 하고, 독도도 한국 땅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최종 조약은 그러지 못하였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코리아에게 돌려줘야 할 섬의 목록을 확정지었는데 그 목록에서 리앙쿠르록스가 빠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⁵⁸⁾ 이는 첫째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이 ‘돌려줘야 할’ ‘섬의 목록’

56) '대일강화조약을 위한 미영 토론(1951.5.2)'을 할 때 “당시까지 미국측의 초안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영국측의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하였던데...”라고 서술하고 있다. (김병렬(1997), 『독도 : 독도 자료총람』, 다다미디어, p.485); “영국은 일본영토를 선으로 포위하는 형식의 초안을 작성했고 독도는 명백히 일본영토외로 즉 한국영토로 표기되었다. 그후 미국측은 1951년 4월 7일자 초안에서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로 기재되었다. 그리고 미국측이 영국을 설득하기 위해 7차에 걸쳐서 영미비밀 회담을 열었는데 7차 회담 자료만 공개되어 있다.”(호사카유지(2016),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 해양법과 독도해법』, 『독도연구』21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p.120)

57) Chapter III Territory

3. Japan renounces all rights, titles and claims to Korea, Formosa and Pescadores;[...] ("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Suggestive Only),"(1951. 3); 국사편찬위원회(2008), 『독도자료 I 미국편』, p.292.

58)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깊이 표시해 왔고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코리아에게 돌려줘야 할 섬의 목록을 확정지었는데 그 목록에서 리앙쿠르 록스가

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확정지었다는 것이며, 셋째 그 목록에 독도가 ‘빠졌다’는 주장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돌려주어야 할 섬의 목록’이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선 첫째로, 조약 제2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조약에는 ‘돌려준다’든가 ‘반환한다’라는 말이 없으며, ‘반환’이 아닌 권리 등의 ‘포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조약의 간략화 방침에 따라 개별 섬의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의 목록’도 당연히 없다.

둘째로, ‘확정짓지 않았다’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총괄한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미국대표가 샌프란시스코 회의(1951년 9월)에서 한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다. 덜레스는, 일부 연합국(영국 등)은 개별 섬의 귀속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⁵⁹⁾

또한, 동 조약 발효직후에 발간된 마이니치(毎日)신문사의 『대일평화조약』 책자에도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특징을 1)기성(既成)사실이 많고 2)미해결 사항이 많은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⁶⁰⁾ 독도뿐만 아니라 쿠릴 열도 주변 섬들도 그 영주권 귀속은 분명히 하지 않았으므로, ‘확정 지었다’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셋째로, ‘빠졌다’는 것도 부적절한 표현이다. ‘누락’의 사전적 의미는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짐’이다. 독도는 ‘누락’의 사전적 의미대로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기입되어야 할 섬이 아니어서 당연히 기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었다’, ‘빠졌다’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⁶¹⁾

일본이 ‘돌려줘야 할 섬의 목록’에 ‘빠졌다’는 견해는, 다시 말하면, "반환해야 할 목록에 빠져 있으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⁶²⁾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no comment)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는 언급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실에 부합하는 표현이다.

빠진 사실에 대하여 늘 비판하고 개탄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령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본에서 일본이 코리아에게 돌려줘야 할 섬의 목록에 리양쿠르 록스가 빠졌다고 하여 결코 독도가 한국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2015),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33회(35차, 2015.5.15), 『제19대 국회 회의록』, 특별위원회, p.6.)

59) 두루뭉술하게 하여 일본을 빨리 독립시켜주고 다른 국제적 해결 수단을 원용하여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60) 毎日新聞社 圖書編集部 編(1952. 5), 『對日平和條約』, 毎日新聞社, p.66.

61) 제목에서부터 ‘누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논문도 있다. (塚本孝(1996),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시 독도 누락과정 전말」, 『한국군사』 3(’96.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pp.39-67; 金炳烈(1998), 「대일본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영유권 문제와 해양주권의 재검토』, 독도연구보전협회; 김명기(2009), 「일본의 기망행위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에서 누락된 독도의 영유권 : 보충적 수단에 의한 해석을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 7 no. 3/4 통권 제21호, pp.36-49

62)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역사』(일본문교출판)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할 영토의 범위에 죽고(=독도)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김영수(2015.12),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 분야 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의 독도관련 내용 비교」, 『독도연구』 제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V. 맺음말

독도와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독도와 울릉도간 거리보다 1.8배 정도 더 멀다. 에도시대의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와 명치 초기의 「기죽도약도」에는 모두 오키섬에서 독도간 거리를 80리(里), 울릉도에서 독도간 거리를 40리로 지도에 표기하고 있다.

『태정관지령』은 명치 10년(1877년)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내무성의 건의를 받아들여 독도를 조선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이며, 그 내용을 당시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공시했으므로 단순한 내부문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약 300년 전인 1690년대 안용복사건때의 외교교섭 결과에 두고 있으므로, 독도가 절대로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메이지(明治)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된다.

『태정관지령』에서 판단근거로 한, 안용복사건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에도막부가 확인한 주요 기록이, 소곡이병위(小谷伊兵衛)가 제출한 『죽도지서부』(竹嶋之書附)이며, 당시 이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돗토리번에서 에도막부에 제출한 지도가 「소곡이병위 제출 죽도지회도」이다. 1696년 안용복 일행이 울릉도와 독도 2개섬의 감세장을 칭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은 숙종실록, 인번지 등 조선 일본 양국의 사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사실은 일본의 공적 기록 어디에도 없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이를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1877년의 『태정관지령』이다.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을 점령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1946.1.29)로 독도를 통치권적·행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분리하고,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로써 독도가 주한미군 관할하의 남한지역에 속함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과 함께, 주한미군으로부터 「SCAP관할지역도」에 표기된 그대로 독도를 포함한 남한지역의 관할권을 인계받음으로써 독도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독도문제가 일단락되었음에도, 대일(對日)평화조약 초안 작성과정에서 일본과 연합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도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은 조약의 간략화 방침에 따라 개별 섬의 영유권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인되었다. 미국전권대표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와 같은 작은 섬은 그 영유권의 귀속이 조약에 일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약 조인 직전(1951.8.)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를 제작했다. 조약 조인 후 조약비준 과정에서 일

본 정부는 다시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부속지도로 일본국회에 제출하고 (1951.10.), 일본 국회는 「일본영역참고도」를 부속지도로 하여 조약을 승인했다. 조약 비준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의도했든 안했든 간에 ‘독도 한국령’을 인정한 것이 된다.

에도시대 안용복 사건 때부터, 명치 시대의 『태정관지령』,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과정에서의 세번에 걸쳐,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본정부 스스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세번이나 인정한 사실과 모순되는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다.